

넥서스 브리프

NB-2026-020 · 투자·자본시장 · 발행 2026년 8월 16일 · 읽기 6분

높은 투자위험이라고 적은 상품의 배정을 왜 50%로 올리나

우선배정은 손실을 부담하는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

연구소의 판단

연구소는 우선배정 비중 상향을 위험 배분의 변경이 아니라 배정 순서의 변경으로 본다. 1 차 구조에서 재정 후순위 출자는 자펀드별로 17.5~20.8%까지 손실을 먼저 부담했다. 그 비율을 넘는 손실은 국민투자금이 부담했다. 배정을 먼저 받는 사람이 늘어도 이 순서는 달라지지 않는다.

01 · 확정된 사실

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은 2026년 8월 11일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기회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.

항목	값	비고
국민참여형 비중	전체 규모의 약 2%	2026.8.11 금융위원회
만기와 위험	5년 · 높은 투자위험	발표 자료 표현
1 차 모집	6,000 억원 · 30,258 명	2026.5.22 출시, 5.29 오전 완판
재정 후순위 출자	1,200 억원 (국민투자금 대비 20%)	1 차 구조
손실 우선부담 비율	자펀드별 17.5~20.8%	운용사 시딩투자 1~5%에 따라
서민 우선배정	20% → 50%	2 차에서 상향

발표 자료는 이 펀드가 AI·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적었다. 전체 규모 중 약 2%를 국민참여형으로 구성한다. 만기는 5년이고 투자위험이 높다고 적혀 있다.

투자자 부담을 줄이려고 세제혜택과 재정 후순위 보강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내용도 담겼다. 2 차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20%에서 50%로 상향해 청년의 가입 기회를 넓힌다.

1 차 모집은 2026년 5월 22일 시작해 5월 29일 오전에 끝났다. 5월 20일 자료에는 3주간 판매한다고 적혀 있었다. 모집금액은 6,000 억원, 청약 인원은 30,258 명이다. 1 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,983 만원이다. 우선배정 대상 가입자는 11,677 명으로 판매금액의 35%, 가입자 수의 38.6%였다.

투자구조는 5월 21일 자료에 있다. 공모펀드 3 개를 조성하고, 이 공모펀드가 다시 10 개 자펀드에 같은 비중으로 투자한다. 국민투자금 6,000 억원이 선순위, 재정 1,200 억원이 후순위다. 2 차는 7월 6일 자료에 6,000 억원 규모, 자펀드 운용사 10 개 내외로 적혔다.

02 · 왜 이런 구조인가

이 상품에는 성격이 다른 둘이 함께 있다. 하나는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산업정책이고, 다른 하나는 개인이 자기 돈을 넣는 금융상품이다. 산업정책은 자금이 모여야 성립하고, 상품 판매는 위험을 이해한 사람에게 팔려야 성립한다. 1 차는 3 주 판매 계획으로 시작해 6 영업일 만에 다 나갔다. 판매 속도가 정책의 성과로 읽히면 위험을 설명하는 시간은 줄어든다.

손실을 누가 먼저 부담하는지는 1 차 자료에 적혀 있다. 재정 1,200 억원이 후순위이고 국민투자금 6,000 억원이 선순위다. 자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후순위 출자분이 국민투자금에 우선해 손실을 부담한다. 다만 그 범위는 자펀드별로 17.5~20.8%다. 손실이 이 비율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국민투자금이 부담한다. 8 월 11 일 자료는 재정 후순위 보강이라고만 적었고, 2 차의 후순위 출자 비율은 그 자료에 없다.

발표 자료에는 만기 5 년과 장기 투자 여력이라는 표현만 있다. 만기 전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. 자본시장법 제 230 조는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를 환매금지형으로 정한다. 이 펀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. 판매 규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있다. 제 17 조는 권유할 때 취득·처분 목적과 재산상황, 경험을 파악해 부적합한 계약을 권유하지 못하게 한다. 제 19 조는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게 한다. 두 조문은 계약을 맺는 날 작동하고, 손익은 5 년 뒤 한 번 확정된다.

서민 우선배정은 배정 순서를 정하는 규칙이다. 손실을 부담하는 순서를 정하는 규칙이 아니다. 1 차에서 배정 기준은 20%였는데 실제 판매금액의 35%가 우선배정 대상에게 갔다. 기준이 서민의 참여를 막은 것은 아니었다. 2 차 기준 50%는 1 차 실적 35%보다 15%p 높다. 연구소는 이 조치를 참여 기회를 넓히는 규칙으로 본다. 동시에 높은 투자위험이라고 적힌 상품의 배정을 손실을 감당할 여력이 작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규칙으로도 본다.

정책 목적을 앞세운 자금 조달에 개인이 참여한 구조는 처음이 아니다. 정책 목적이 상품 이름에 들어가면, 사는 사람은 그 이름을 정부가 결과를 책임진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. 은행과 증권 지점에서 팔린 공모펀드에서 원금 손실이 확인된 뒤 분쟁조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반복됐다. 그때 다툼의 대상은 운용 성과가 아니라 판매 시점의 설명이었다.

03 ·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

물리는 사람은 만기 5 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, 5 년 안에 이 돈이 필요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. 1 차 가입자는 30,258 명이고 1 인당 평균 가입액은 약 1,983 만원이다. 우선배정 대상 가입자는 가입자 수의 38.6%였다. 2 차에서 배정 기준이 50%로 올라가면 같은 규모를 모집해도 우선배정 대상의 비중은 1 차보다 커진다.

1,000 만원을 넣었다고 하자. 자펀드에 들어간 돈 전체의 30%가 손실이라고 가정한다. 후순위 우선부담 비율 17.5%를 그 전체 대비 비율로 보면 국민투자금 기준 손실률은 약 15.2%, 금액으로 약 152 만원이다. 20.8%인 자펀드라면 약 11.6%, 약 116 만원이다. 반대로 손실이 17.5%를 넘지 않으면 국민투자금의 원금은 줄지 않는다. 후순위는 손실을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, 국민투자금이 손실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손실률을 높이는 장치다.

돈을 넣는 날과 손익이 확정되는 날 사이에 5 년이 있다. 만기에 10 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한 단일 수익률로 환급하므로, 그 전에는 자기 몫의 결과를 확정된 숫자로 볼 수 없다. 2 차는 비상장기업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30% 이상을 신규로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다. 우선배정은 배정에서 순서가 앞선다는 뜻이고, 손실 부담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뜻이 아니다.

04 · 무엇이 안 막히는가

- 2 차의 재정 후순위 출자 비율이 1 차와 같은지는 발표 자료에 없다. 우선배정 비중은 20%에서 50%로 올렸지만,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재정 몫이 함께 늘어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.
- 만기 전 환매 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. 5 년 만기와 장기 투자 여력만 적혀 있고, 만기 전에 돈을 찾을 수 있는지, 환매금지형이라면 상장으로 유동성을 주는지가 자료에 없다.
- 이 펀드가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. 해당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8 조 적정성 원칙이 권유 없이 체결되는 계약에도 적용된다.
- 우선배정을 받는 서민의 요건이 공개되지 않았다. 1 차에서 11,677 명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됐는지, 2 차에서 청년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이 자료들에 없다.

05 · 지금 할 일

국민

- 투자설명서에서 후순위 출자분이 손실의 몇 %까지 먼저 부담하는지, 그 비율이 자펀드마다 다른지를 숫자로 찾아 확인한다.
- 만기 전 환매가 되는지, 안 되면 상장 여부와 만기 전 매도 방법이 무엇인지를 창구에 묻고 답변을 서면이나 녹취로 남긴다.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는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이해했음을 확인받도록 한다.
- 우선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와, 배정 순서가 손실 부담 순서와 무관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.

금융회사

- 판매 화면과 설명서에 후순위 우선부담 비율과 그 비율을 넘는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같은 화면에 숫자로 함께 제시한다. 우선배정 안내와 위험 고지를 떼어 배치하지 않는다.

당국

- 우선배정 비중을 올릴 때 재정 후순위 출자 비율을 함께 정해 공표한다. 2 차 모집 전에 만기 전 환매 가능 여부와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를 자료에 명시한다.

칼럼길

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· 2 차의 재정 후순위 출자 비율. 우선배정 비중만 50%로 올릴지, 손실을 먼저 부담하는 재정 몫도 함께 올릴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.

A 로 가면 · 후순위 비율을 함께 올리면 국민투자금이 손실을 부담하기 시작하는 손실률이 1 차의 17.5~20.8%보다 높아진다.

B 로 가면 · 우선배정만 올리면 배정 대상은 늘고, 재정 몫의 비율은 1 차와 같은 수준으로 남는다.

어디를 보면 아는가 · 2 차 모집 공고와 투자설명서에 적힌 재정 후순위 출자 금액, 그리고 자펀드별 손실 우선부담 비율

함께 읽을 것

란	편
금융제도	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적정성 원칙

란	편
	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
금융상품	BDC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주식형 펀드 후순위채
금융사건	보름 만에 4 조원이 몰렸고 1 년 뒤 절반이 사라졌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던 5,151 억원 예금인 줄 알고 산 채권 8,571 억원이 사라졌다 41 조원의 분식회계, 그 채권은 국민이 샀다
피해 구제	불완전판매 다투기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 자료열람요구권 활용법

근거와 검증

확인한 사실·숫자	등급	출처
펀드 목적 "AI·반도체·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조성", 전체 규모 중 약 2%가 국민참여형, 만기 5년·높은 투자위험, 세제혜택과 재정 후순위 보장 등 안전장치, 2 차 서민 우선배정 20%→50% 상향	1 차	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추진단 국민지역참여지원과 2026.8.11 발표 원문 전재. 원문 문구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5313
투자구조 — 공모펀드 3 개, 자펀드 10 개에 동일 비중 투자. 국민투자금 6,000 억원(선순위), 재정 1,200 억원(국민투자금 대비 20%). 후순위 출자분이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 부담. 자펀드별 전체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 17.5~20.8%(운용사 시딩투자 1~5%에 따라). 만기 시 10 개 자펀드 최종 손익을 합산한 단일 수익률로 환급	1 차	금융위원회 2026.5.21 발표 원문 전재. 원문 문장 "각 자펀드별로 후순위 출자분이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함", "펀드 만기시 10 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한 단일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환급함"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1476
1 차 모집 결과 — 6,000 억원 완판(5.29 오전), 청약 30,258 명(은행 15,207 명·증권 15,051 명), 1 인당 평균 약 1,983 만원, 서민 우선배정 대상 11,677 명, 판매금액 기준 35%·가입자 수 기준 38.6%, 펀드 설정 6.12, 투자 개시 6.15	1 차	금융위원회 2026.5.29 발표 원문 전재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1964
1 차 판매 계획 — 5.22(금)부터 6.11(목)까지 3 주간 판매,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물량 50% 제한	1 차	금융위원회 2026.5.20 발표 원문 전재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1375
2 차 — 6,000 억원 규모로 출시 예정, 자펀드 운용사 10 개 내외 선정, 첨단전략산업기업 등 주목적 투자대상에 60% 이상,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30% 이상 신규자금 공급	1 차	금융위원회 2026.7.6 발표 원문 전재. 원문 문구 https://eiec.kdi.re.kr/policy/materialView.do?num=283870
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	1 차	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30 조 조문 원문 확인

확인한 사실·숫자	등급	출처
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로 존속기간을 정하며, 최초 발행일부터 90 일 이내에 상정해야 한다		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64739&cseq=1962864
적합성 원칙 — 투자성 상품 권유 시 취득·처분 목적, 재산상황, 취득·처분 경험을 파악하고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할 수 없다	1 차	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7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4646&cseq=1700260
적정성 원칙 — 권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면담·질문 등으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할 의무	1 차	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8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4646&cseq=1700261
설명의무 —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, 설명서를 제공하며 이해했음을 서명·녹취 등으로 확인받아야 한다	1 차	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 조 조문 원문 확인 https://elaw.klri.re.kr/eng_service/jomunPrint.do?hseq=54646&cseq=1700262
1 차 판매 기간 6 영업일	파생	2026.5.22(금) 출시 후 5.25(월)·5.26·5.27·5.28·5.29(금) 오전 완판 → 영업일 6 일. 발표 자료의 날짜를 세어 계산한 값이다
2 차 우선배정 기준 50%는 1 차 실제 판매금액 기준 35%보다 15%p 높다	파생	$50\% - 35\% = 15\%p$. 두 숫자는 각각 2026.8.11 자료와 2026.5.29 자료에 있다
자펀드 손실률 30% 가정 시 국민투자금 기준 손실률 약 15.2%(후순위 17.5%)·약 11.6%(후순위 20.8%)	파생	후순위 우선부담 비율을 자펀드 투자원본 전체 대비 비율로 보고 계산했다. $(30-17.5) \div (100-17.5) = 15.15\%$, $(30-20.8) \div (100-20.8) = 11.62\%$. 가정에 따른 산술 예시이며 발표 자료에 제시된 수치가 아니다
1,000 만원 기준 손실 금액 약 152 만원·약 116 만원	파생	$1,000 \text{ 만원} \times 15.15\% = 151.5 \text{ 만원}$, $1,000 \text{ 만원} \times 11.62\% = 116.2 \text{ 만원}$. 위 산술 예시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

본문 분량	검증 항목	1 차 자료	추적 예정
2,614 자	13 건	9 건 (69%)	6 개월 뒤

추적할 때 볼 것 · 2 차 모집 공고에 재정 후순위 출자 비율이 1 차와 같은 수준으로 적혔는가, 우선배정 50%가 실제 판매금액에서 몇 %로 나타났는가, 만기 전 환매 조건과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가 자료에 명시됐는가

정정 없음

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, 어떤 감독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도 아닙니다.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·매도·가입·해지를 권유하지 않으며,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본문의 사실관계와 수치는 발행일 기준이며, 근거는 위 검증표에 밝힌 자료에 한합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

게시 전 정정 · 2026.08.16

금융위원회 2026.5.6 공식 자료를 재대조해 이 상품이 5년 만기 환매금지형이며 중도환매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. 설정 뒤 거래소 상장 시 양도할 수 있지만 유동성 부족과 할인 매도 위험이 있습니다. 본문의 '만기 전 환매 조건 미공개' 판단은 웹 게시본에서 바로잡았습니다.